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김두진 (고려대학교)

유럽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로서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통합의 주역으로서 주로 정부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다른 통합의 경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던져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자유주의 하에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 이들 집단이 불가피하게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목 차

1. 문제제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식의 차이 극복
2.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거대기업 역할: 인식 전환
3. 유럽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수준 공공정책 결정자로
4.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의 전략과 방법론: '거대기업' 주도 정책 네트워크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문제제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식의 차이 극복

-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경제통합에 있어서 유럽의 전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유럽의 경우처럼 단계적 경제통합, 즉 '자유무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정치통합'의 수순을 밟아 가고, 동시에 유럽처럼 국가가 중심이 된 기능적, 제도적 통합 및 구속적 협정을 근간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동아시아의 경우는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동아시아 3개국이 강성의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동아시아 통합의 관건이 되어 왔음.
- 구체적인 예로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에 의하면, 동아시아 주요 3국간에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여전히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을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미국과 러시아 등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영역 확대를 경계함.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 일본은 동아시아를 '광역 동아시아'로 인식하여 구성국 확대를 피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국가의 일부를 포함하는 확대된 동아시아 지역 인식을 시작함.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화된 동아시아가 더 유효하고 보기 때문임.
 - 한국의 전략의 기초는 첫째, 주변국과의 다중 전략적 관계를 맺고, 둘째, 연성권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환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예상함.
-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유럽의 EU가 걸어온 통합방식과 다른 경로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음. 한편으로 유럽의 경우처럼 단일화폐가 통합의 결과인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단일화폐를 먼저 도입할 수 있지 않은가,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네트워크—다국적이

든, 다국가이든—이 경제통합에 큰 추진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구체적 접근 방법을 살펴볼 때, 동아시아 경제권 창설에 대한 구상이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정부 내지 국가 중심적 FTA 체결 정도이며, 거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경제통합의 허브(hub) 내지 네트워크 창설하고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봄.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간행된 일본 『통상백서』에서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창설 구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제로 아세안 전체, 한국, 중국, 타이완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아이러니하게도 비즈니스권 창설에 관련한 일본의 구상 중 그 주역은 여전히 국가 내지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음. EU와 비교하여 제도화 과정에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임.
- 전반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의 특징이 동아시아 통합의 주체가 여전히 ‘국가’ 내지 ‘정부’였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 관한 주류적 흐름이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특히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거대기업의 역할과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지적 연원을 유럽통합 과정의 거대기업의 역할에서 찾고자 함.
-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행위자로서, 또 정치적 행위자로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럽의 거대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통합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적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자 함.

*동아시아에서는
지역경제권 창설이
논의되더라도 정부주도의
FTA 체결구상정도이지
거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경제통합구상과는
거리가 멀*

2.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거대기업(Big Business) 역할: 인식 전환

(1) 세계화와 거대기업의 정치경제적 역할의 증대

-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상을 가져왔고, 시장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정보의 세계화를 통해 다국

시장의 세계화, 생산의 세계화, 정보의 세계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이 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게 됨. 헬드(1999)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기업권력이 전지구적 생산네트워크(GPNs: global production networks), 무역, 그리고 기술의 생산과 확산에 연계되어 있는 정도의 심대함을 지적함.

- 지구상의 100대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 해외 자산의 20%를 통제함.
 - 세계적으로 6백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해외시장 매출의 30%를 차지함.
 - 다국적 기업이 세계 무역의 약 2/3를 차지함.
-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대응하려는 다국적 기업 거버넌스의 출현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부-산업(혹은 국가-기업)간의 권위관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등장함. 예를 들어, 서구에서 시장의 출현을 ‘정치성 산물’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자이스만(Zysman, 1983)과 같은 학자들의 논거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은 다국적 기업이 국가 권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영향력(leverage)을 행사하게 되었는가에 이론적 관심이 높아짐.
- 1990년대에 들어, 에덴(Eden)이 국제정치경제(IPE) 분야에서 국가의 상대역으로 거대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끌어들어야 한다(Bring the firm back in)고 주장하기 시작함. 세계적 수준에서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또 1990년대 글로벌 기업 형태의 다국적 기업은, 투자, 무역 및 기술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미국 EU 및 일본을 포괄하는 트리아드(Triad) 경제내 교역의 80%를 주도함.
 - 한걸음 더 나아가, 샬리(Sally, 1994)의 경우는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의미의 다국적 기업에 관한 주목을 넘어서서, 경제적 주요 행위자로서 ‘개별(individual)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함.¹⁾ 1994년에 샬리는 지난 25년간 정치경제적 연구분야에서 국가중심적인 패러다임하에 정부 혹은 국제기구라는 해묵은 의제에만 매달려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개별 다국적 기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함.
 - 라조닉(Lazonick 1991)에 의하면 시장의 신비(myth of market)가 기업의 ‘보이는 손’, 즉 제도적 시장 조정 기능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찬들러(Chandler, 1977) 역시 조직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 관련하여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서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는 손’을 대신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함.

(2)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의 등장과 거대기업의 ‘시장권위’ 강화

- 제도주의 시각에서는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는 시장의 형성 과정 자체가 국가의 의도적 개입의 산물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정치적 산물로 봄. 시장의 자연 발생적 기원을 부인하고,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시장이라는 것은 국지적인 생활필수품의 교환, 귀금속, 향료 등 사치재의 제 교역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함(장하준 1997).
- 이런 맥락에서 시장 창출을 둘러싸고 다국적기업과 국가 사이, 즉 정치적 권위와 시장 권위 간의 긴장 상황이 나타나게 됨. 여기서 ‘시장권위(market authority)’는 시장창출력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이 행사하는 경제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치력을 의미함. 거대기업은 더 이상 시장행위자(market-taker)가 아니라, 시장창출자(market-shaper)로 변화하게 됨(Kim & Kim, 2006).
 - 국제무역레짐의 등장으로 엄격해진 무역규제 상황에서 한 국가의 부의 문제는 이제 기술 혹은 지식을 기반으로 창출하게 되어, 특정 산업 부문에 관한한 점차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쟁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됨. 이처럼 지식기반 기술(산업)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의 거버넌스의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어 줌.
 - 점차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하에서 규제 시장(governed market)의 혜택을 입었던 거대기업—한국의 경우 재벌그룹—이 헤게몬(hegemon)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국가에 대한 대응세력(countervailing force)으로 등장하게 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됨. 한국의 재벌 거버넌스 역시 이러한 대응세력의 한 형태로 파악되어야 필요성이 증대됨(Kim, Kim & Kim, 2008).
- 1990년대 중반부터, 코엔(Coen)과 코슨(Cawson, 1985; 1997)같은 학자는 경험적인 분석을 기초로, 유럽 정치에서 기업의 정치 활동을 새로운 현상으로 학문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함.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조차도 오히려 EU내의 정부-기업간의 힘의 역학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유럽의 공공정책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임. 따라서 EU의 제도권 내에서 이들 대기업들은 하나의 인사이드(insider)로 존재해 왔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김두진, 2004).
 - 특히,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대기업을 회원국에 대한

*EU 제도권 내에서
대기업들은 유럽의
공공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인사이드’로
존재해 왔음*

신자유주의하에서
 ‘경쟁우위’의 강조는
 결국 국부 증진을
 겨냥하여 국가에
 대비하여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현상이 필수불가결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음

정치적 채널로 이용했고, 때에 따라서 이들 대기업은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중간 매개체로 활동하기 시작했음(Coen, 1997; 1998; 1999).

- 한국의 대기업의 정치성이 문화적으로 터부시 되어 왔고, 정경분리의 원칙이 하나의 시대적 담론으로 고착화되어 온 한국 사회의 인식의 벽이 상상외로 높은 반면,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거대기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것은 자본 혹은 기업의 영향력에 관한 그 이전의 한 연구의 유형은 슈미터(Schmitter)류의 코프라티즘, 즉 국가-자본-노동의 삼자협상파트너십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협상력 행사 이상을 의미하며, 정치적 로비스트로서의 거대기업 이상을 상정함. 이미 이들 자체가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ctor)로 인식되고 있음.
- 서니의 경쟁국가의 개념과 연관하여 볼 때,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의 주도하에 시장 확대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쟁국가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일종의 ‘국가의 상품화(commercialization)’가 강조되어 경쟁국가는 세계화의 심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개입주의 국가(interventionist state)와는 다른 측면에서 초국적적인 경쟁을 강조하게 됨. 국가가 기술과 다국적기업을 통한 ‘경쟁우위’를 부추기는 변형국가(transformative state)²⁾의 면모를 띠면서 ‘거시 경제적 개입’으로 성격의 전환을 가져오게 됨(Cerny, 1995; 2000). 결국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강조는 결국 국부 증진을 겨냥하여 국가에 대비하여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현상이 필수불가결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음.

3. 유럽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수준(European level) 공공정책 결정자로

(1) EU수준에서 거대기업의 존재

-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의 유럽공동체 형성은 오히려 기업에 대해 무관심한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음.
- 유럽의 경우, 단일 시장의 등장과 EU 주요 제도들의 심화 확대 과정에서 유럽 내의 기업들이 산업 부문과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정치적 행

위를 하게 하는 정당성과 구실을 제공하게 됨.

- EU가 정부 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음. 유럽기업들이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자국을 대표하게 됨.
- 1970년대 산업 담당 커미셔너였던 에티엔트 다비농(Etienne Davignon)의 의해, 유럽의 거대기업들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나 정책입안 과정에서 항상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함.
- 1987년 이후 단일유럽의정서(SEA)이후 유럽 차원에서 EU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브뤼셀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의 수는 3,000여개에 이르렀고, 1만 5,000여 명의 인력이 관여하고 있었음.
-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 회원국의 국가와 산업(기업)간 밀접한 관계 형성. EU는 산업 및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산업(예: HDTV), 항공산업(예: 에어버스)과 같은 산업 부문과 연관하여 EU의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왔음.
- 예를 들어 유럽라운드 테이블(ERT)은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집단이었음. 특히 UNICE,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위원회(AMCHAM-EU)가 유럽 내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김두진, 2006).

(2) EU 공공정책의 사례: FP(Framework programmes)

〈표 1〉 Framework Programmes 주요 프로젝트

산업 부문	프로젝트 명	주요 과제	참여국(업체)
정보 산업	ESPRIT	고도정보기술, FA, OA, 소프트웨어 텔레콤, VAN HDTV, 첨단방송장비 반도체	EC 12개국
	RACE		EC 12개국
	EUREKA		유럽 19개국
	JESSI		독일, 프랑스
산업 기술	BRITE	중소기업설비	EC 12 개국
항공 산업	Airbus Eurofighter Arian	민간항공기 개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위성 개발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생명 산업	FAST, BEP	유전자 연구	EC 12개국
기초 과학	CERN	입자 물리학	유럽 14개국

출처: EU Commission and Deutsche Airbus, 이갑수(2007)

**유럽의 경우,
단일 시장의 등장과
EU 주요 제도들의 심화
확대 과정에서 유럽 내의
기업들이 산업 부문과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정치적 행위를 하게
하는 정당성과 구실을
제공하게 됨**

**유럽의 HDTV의
실패의 경험은
동아시아의 통합 과정에
시사점을 주는 바,
지역통합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산업의
성공여부가 곧 그 지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임**

- EU 공공정책 중 공동 R&D 정책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로 집약됨.
 - 1984년 제1차 FP가 시작되어 2006년 현재 6차 FP가 진행 중임. 제7차 FP는 2007~2013년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됨. IT부문의 공동기술정책은 유럽단일화법에 시작된 것으로 미·일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여 유럽의 IT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것이 목적임.
 -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JESSI 계획은 지멘스(독일), 필립스(네덜란드) 및 톰슨(프랑스)사의 합작과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것임.
 - RACE(R&D i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Europe)는 통신산업의 개발로 Telecommunication, 부가가치통신망(VAN), LAN (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억 유로 투자함.
 - BRITE(Basic Research in Industrial Technology in Europe)는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약산업의 현대 프로젝트임.
 - EUREKA(European Research Coordinator Agency)는 FP와는 별도로 거의 전 유럽국가가 참여하는 기술공동체이며, HDTV(고화질 TV) 등 첨단방송기술 개발하는 것이 주임무임.

(3) '경쟁우위' 와 '유럽챔피언' 의 시도: HDTV와 에어버스

가. HDTV: 실패 사례

- 유럽이 주도했던 HDTV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례인 반면에 에어버스는 매우 성공적인 유럽챔피언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EU의 HDTV 프로젝트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된 디지털 HDTV 방식에 완패한 사례임. HDTV를 둘러싼 경쟁의 초미의 관심은 바로 전송방식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하는 것이었음.
 - 그 당시 선두주자였던 일본과 유럽이 아날로그 방식에 주력한 반면에, 미국은 미래를 겨냥한 디지털을 고집함. 결국 1993년 6월 유럽이 디지털로 전환하게 됨.
- 유럽의 HDTV의 실패의 경험은 동아시아의 통합 과정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교훈을 주고 있다. 지역통합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산업의 성공여부가 곧 그 지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임.

나. 유럽 '에어버스(Airbus)': EU항공산업의 성공 사례

〈표 2〉 에어버스 참여국 및 기업

국가별	대표기업	참여지분	제품 모델
프랑스	Aérospatiale	37.9%	A300, A310
독일	Deutsche Airbus	37.9%	A320, A330
영국	British Aerospace	20.0%	A340
스페인	CASA	4.2%	

출처: EU Commission and Deutsche Airbus, 이갑수(2007)

- 최근 가장 치열한 경쟁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사와 미국 보잉사 간의 항공산업의 치열한 대결은 EU가 항공산업에서 유럽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가장 성공한 사례임을 보여주고 있음.
- 에어버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항공기 시장을 독점해 온 미국기업들 (Boeing, Lockheed, McDonnell Douglas)에 대항하기 위해 1970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이 항공우주산업을 합친 후 2001년 단일 기업으로 탈바꿈한 다국적기업임.
 - 이 회사들은 에어버스라는 이름하에 국가주의적 색채를 탈피하고 상업용 항공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협력하였음. 유럽항공기 산업의 재편에 따라 에어버스는 두 개의 기업이 소유하는 단일회사로 탈바꿈하였음. 즉 독일의 Daimler Chrysler Aerospace AG, 프랑스의 국영기업인 Aérospatiale Marta SA 및 스페인 국영기업 Construcciones Aeronauticas SA가 대주주인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와 영국의 BAE(British Aerospace)가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에어버스는 당시 미국 거대기업들과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세계 상업용 항공기 시장을 에어버스와 보잉에 의한 양자 복점체제로 전환하는데(록히드는 퇴출, 맥도널 더글라스는 보잉에 합병됨)까지 성공하게 됨. 1992년 30%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처음으로 항공시장에 '이변'이 발생하여, 에어버스가 305대의 여객기를 납품해 281 대의 보잉을 능가하였음. 88년간 전 세계 항공기 산업의 선두를 차지했던 보잉사에게 대단한 충격이었고, 2004년도에는 53%에 달하게 됨.

**유럽 에어버스사와
미국 보잉사 간의
항공산업의 치열한 대결은
EU가 항공산업에서
유럽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줌**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의
확대 전략으로는
‘동북아 우선 통합’
이후 동남아 지역,
혹은 서남아 지역(인도
포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에어버스 A380은 오늘날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상업항공 기임. A380-900의 경우 일반적으로 좌석 배치를 할 경우 1000석 이상 설치가 가능함.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승객들의 체형과 관계없이 다리를 쭉 펼 수 있는 정도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항공기임에 틀림이 없음. A380을 제작함으로써 ‘경쟁우위’면에서 한 발짝 앞서려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됨.

4.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의 전략과 방법론: ‘거대기업’ 주도 정책 네트워크(Big Business- centered policy network)

- 크루그만(Krugman, 1992)은 지역블록 형성의 주요 동기를 시장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서 찾음. 예를 들어, 최근 유럽은 미국 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를 상대하여 단일 항공시장 형성을 이룩함.
- 전략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의 확대 전략으로는 ‘동북아 우선 통합’ 이후 동남아 지역, 혹은 서남아 지역(인도 포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에어버스의 사례의 정책적 함의는 일국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 즉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
 - 에어버스의 성공적 세계시장 점유의 사례는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전략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첨단 인력의 확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좀처럼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우위’를 획득한 사례임.
 - 이것은 유럽의 특정국가의 ‘내셔널 챔피언’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라기보다 다국가기업의 형태인 ‘유럽 챔피언’에 의해 달성된 쾌거로 봄(김두진, 2006).
-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을 하기 위한 전초로, <특정 기술>, <특정 산업부문>별 중심의 지역주의, 예를 들어, 항공산업 공동체(서정욱, 2004), 전자산업 공동체, 자동차 산업 공동체, IT 산업 공동체 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될 것임.
 -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는, 한·중·일 3국간에 ‘다국가’ 거대기업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유럽 챔피언의 경우처럼 ‘아시아 챔피언’을 만드

는 시도가 한 형태가 될 수 있음.

-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의 기술개발(예: IT,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한국,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된 특정 산업중심(industry-centered) 지역주의를 상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시도로, 각국을 대표하는 거대기업이 공정한 지분으로 참여하여, 국제분업 및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윈-윈(win-win)게임으로 기술, 산업 연대를 구축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모멘트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북아 무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 중국의 가공 → 중국의 대미, 대 EU 최종재 수출’의 삼각무역패턴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오영석 외, 2010).

○ 둘째, 범(汎)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프로젝트 — 유럽의 EUREKA, 혹은 ESPRIT처럼 — 를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산업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 유럽의 FP처럼 — 을 추진함. 이를 통해 3국간 기술의 표준화를 기하고 동시에 지식집약산업 부문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예: EU의 HDTV 개발 사례처럼).

- 셋째, 동아시아의 ‘다국가’ 기업 컨소시움이 주도가 되는 공동문화 콘텐츠 산업,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수 있음. 이것은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과 공유에 도움이 될 것임.
- 국가개입주의 형태의 상업성 문화 콘텐츠의 양상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 문화충돌 혹은 문명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음.
- 방법론에서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경쟁할 만한 공동의 영화제작(예: 해리 포터, 한·중의 영화 ‘만추’), 공동 역사 콘텐츠 영상 산업 — 독일-프랑스 공동역사 교과서 출간이 정부 주도인데 비해, 민간 주도로 한 것처럼 — 을 초국적 문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범아시아 공동 시장>(Asian Common Market) 이전의 단계로 <동아시아 경제특구> 내지 <동아시아 경제자유지대>를 만들되, 이곳에서 동아시아 역내 다국가기업 간에 실험적인(달러가 아닌 아시아 역내의 지불 수단으로 고안된) ‘단일화폐’ 혹은 특정 아시아 국가의 화폐(일정 기간 번갈아 가며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를 통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제안하여 합의할 수 있음.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을 위한 전초로서
특정 기술, 특정 산업
부문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동아시아(혹은 동북아)
지역통합의 논의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국가 혹은 정부 중심의
접근방법론을 벗어나서,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서클이 주축이 되는
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의 요약

-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 일본, 한국 간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주요 3개국이 어떻게 강성의 국가주의를 극복할 것인가가 논의의 관건이 되어 왔음.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불가피하게 다른 경로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짐.
 -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거대기업의 역할과 그 함의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적 기원을 유럽 통합 과정의 거대 기업의 역할에서 찾고자함.
 -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의 학자군에 의해서 거대기업은 경제적 행위자로서 또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되어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나아가서 학문적인 면에서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졌으며, 특히 이론적으로 ‘개별’ 다국적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국부 및 시장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이 ‘시장권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점차 국가 권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응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본 연구의 강조점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자유주의 하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이들 집단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불가피하게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함.

(2)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혹은 동북아) 지역통합의 논의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국가 혹은 정부 중심의 접근방법론을 벗어나서, 유럽의 경우처럼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서클이 주축이 되는 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와 함께, FTA 와 같은 쌍방주의 통합 논의의 주도 세력이 정부의 정책입안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는 통합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이처럼 거대기업의 역할이 빈번히 배제되는 경향을 낱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동아시아 사회내에서 기업이 여전히 국제기구 혹은 국가에 종속되는 존재라는 고답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학문의 균형 면에서 대기업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흔히 한국 사회 내에 보수-개혁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높았음.
- 이론적인 측면에서, 거대기업이 경제적 행위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치적 행위자임을 인정하는 학문적 인식이 공유되어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 <재벌 거버넌스>의 현실성을 훨씬 더 명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봄.
 - 동시에 정치경제부문에서 ‘시장-국가’의 이분법적 틀을 뛰어넘어, 국가에 상대적 힘(leverage)을 미치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서 거대기업에 주목해야 할 학문적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3) 정책적 제언

-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에 전략적 동맹이 시급한 역내 ‘산업’간 네트워크(regional intra-industry network)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동아시아의 전반적 경제통합으로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경제통합 논의 및 추진에 거대기업 및 기업의 대표성이 있는 각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실체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거대그룹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및 정책 입안자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동아시아 3국간에 에어버스에 준하는 항공우주산업 공동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음(예: 최근 중국판 스텔스 개발에 비추어).
- 경제통합과 연관하여 정부와 기업이 연계된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거대기업이 통합과 연관된 정책에 자연스럽게 관여 내지 연루되도록 함. APEC의 여러 정책 제시에 이런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시도되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이전에 학습효과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동아시아 국가 간에
전략적 동맹이 시급한
역내 ‘산업’ 간 네트워크
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동아시아의 전반적
경제통합으로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EU와 NAFTA 등과 비교하여, 국가의 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atic shift)’이 올 경우에, 제로-섬에 가까운 위험성(risk)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기술—예를 들어, 반도체, 전기자동차, 태양열 발전소 등—개발 프로젝트에 3개국 거대기업군과 정부 간의 컨소시움이 형성되도록 함.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해 거대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경제적 분석을 피하였으나,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있음
 - 거대기업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경제통합에 관심이 있는지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엘리트 인터뷰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엘리트 인터뷰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점검해야 할 것임.
- 향후 연구방향의 초점은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거대기업 및 정책 엘리트를 대상으로 3국간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과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가 무엇인지 점검해야함.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김두진

現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1992년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2003년 영국 서섹스(Sussex) 대학에서 두 번째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저서로 *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uth Korea: Challenging Globalisation and the Post-Crisis Reforms*이 있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2005~2008년간 프랑스 시앙스 포(파리정치대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한국학교수로 재직하며 정치경제학을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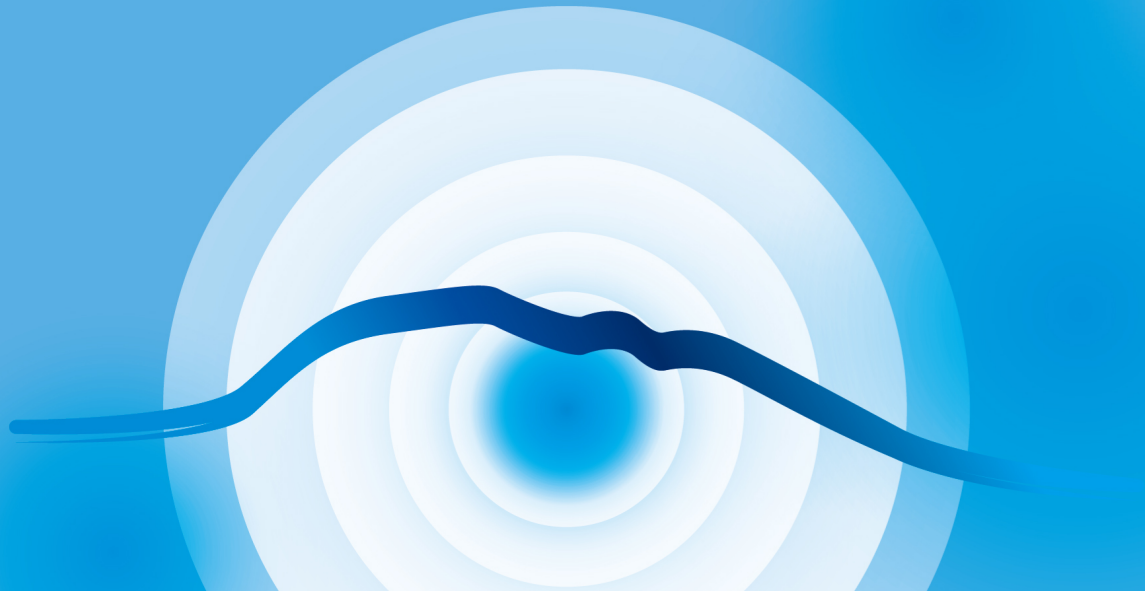
주석

- 1) 2007년 부즈 알렌(Booz Allen) 보고서에 의하면, 단일 그룹 삼성이 한국의 세금 수입의 8%, 전체 수출의 22%, 주식시장 자본화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개별' 다국적기업의 중요성이 한국에서는 더욱 실감있게 느껴지고 있음.
- 2) 바이스(Weiss)는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에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변형 능력이 강하면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대해 적응 능력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세계화의 희생자라기 보다는 추동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따라서 환율 조정, 무역 분쟁에 직면하여 이들 국가가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세계화 추진을 할 경우에 변형국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김두진(2004). 『EU의 무역레짐과 아시아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아연출판부.
- _____(2006). 『EU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거대기업 역할론』 삼성경제연구원.
- 서정욱(2004).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에 관한 지역주의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6호.
- 오영석 외(2010). ‘한중일 국제 분업 구조 분석과 협력증진방안’, 산업연구원.
- 이갑수(2007). ‘EU 공동 R&D정책의 경제이론과 실제: 3가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2호.
- 장하준(1999). ‘제도주의적 경제학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 Cawson, A. ed.(1985). *Organized Interests and the State: Studies in Meso-corporatism*, Beverley Hills, Sage.
- Cawson, A. ed.(1997). ‘Big Firms as Political Actors: Corporate Power and the Governance of the European Electronics Industry’, in *Participation and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edited by H. Wallace and A. R. Young, Oxford, Clarendon Press.
- Cerny, Philp G.(1995). ‘Globalization and the Changing Logic of Collective A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4.
- _____(2000). ‘Structuring the political agenda: Public goods, states and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in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edited by Ronen Pal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andler Jr., A. D.(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en, D.(1997). ‘The Evolution of the large firm as a political actor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4:1, March, 91-108.
- _____(1998). ‘The European Business Interest and the Nation State: Large-firm Lobbying in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s’, *Journal of Public Policy*, 18:1, 75-100.
- Eden, L.(1993). “Bring the Firm Back In: Multinational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Multinationals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edited by L. Eden and E. H. Potter, Basingstoke, Macmillan.
- Held, D., McGrew, A., Goldblatt, D., and Perraton, J.(1999). *Global Transformation*, Cambridge, Polity Press.
- Kim, Young-Chan, Kim, Doo-Jin & Kim, Young Jun(2008). *South Korea: Challenging Globalisation and the Post-Crisis Reforms*, edited by Chandos, Oxford.

- Kim, Doo-Jin & Kim, Young-Chan(2006). *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London, Palgrave Macmillan.
- Krugman, P.(1992). 'Does the new trade theory require a new trade policy', *World Economy*, 15: 423-41.
- Lazonick, W.(1991).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ly, R.(1994). 'Multinational enterprises, political economy and institutional theory: domestic embeddednes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161-192.
- Zysman, J.(1983). *Governments, Markets, and Growth*, Oxford, Robertson.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6회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 5. 27 ~ 29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평화재단 / 동아시아재단
-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제교류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제주대학교 / PRIO / 코리아 DMZ협의회 /
UN거버넌스센터 / 대한지질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